

光日春秋



김형주
상대대 총관리방렴소통연구소
연구교수

이제 곧 삼일절이다. 이날이 되면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내걸리고, 아마도 어느 기념식장에선가는 추모(追慕)의 대상으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함께 호국영령(護國英靈)이 불릴 것이다. 그런데 삼일절에 호국영령을 추모해도 되는 걸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쓴 것은 맞을까?

사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익은 말이지만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참고로 서울지방보훈청이 2019년에 펴낸 '일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을 보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을 뜻하고, 호국영령은 '전장에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뜻하는 말이다. 즉 순국선열은 삼일절의 추모 대상이고, 호국영령은 6·25기념일의 추모 대상인 셈이다. 이처럼 순국

보훈용어 이대로 괜찮을까

선열과 호국영령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말뜻과 지시 대상이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봐도 삼일절은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1919년의 3·1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로 되어 있다. 즉 삼일절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인 것이다. 따라서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호국영령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뜻을 몰라서 언급하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에서 199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삼일절'과 '6·25 전쟁일', '현충일'이 포함된 기사의 연관어를 검색하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의미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일절 관련 기사에 호국영령이 등장하는가 하면, 6·25 전쟁기념일 관련 기사에 순국선열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말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교양인의 언어로 착각하는 비정성적인 언어관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내 말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언어습관에서 비롯된 일일 수도 있다. 어려운 말을 쓰면 품위 있어 보인다는 잘못

된 생각이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순국선열'을 '독립유공자'로, '호국영령'을 '전쟁유공자'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어떨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쉬운 말을 놔두고 굳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라는 말은 누구나 그 뜻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고 '전쟁유공자'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다. 어려운 한자어에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깊은 추모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여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 묵념의 대상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규정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화 유공자, 그리고 화재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 중에 순직한 공무원도 공식적인 묵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그들 모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이 전장에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추모의 언어도 특정한 방식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 추모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과거를 더 넓게 이해하는 일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과거 EBS 프로그램 '인생이야기 파란만장'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사연이 하나 소개되었다. 2002년 김해 민항기 추락 사고 당시, 이수라장이 된 기내에서 자신의 사장을 포함해 20여명을 구출해낸 영웅 설익수 씨의 이야기다. 목숨을 빚진 사장은 처음엔 고마워하는 듯했으나 점차 설씨가 사고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힘들어하자 태도가 변해하였다. 보상은커녕 "회사 사장이 어려우니 퇴사하라"며 은인을 내쫓은 것이다.

인간은 도저히 값을 수 없는 거대한 은혜를 입으면 상대방을 볼 때마다 자신의 무력함과 채무 상태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게 된다. 결국 사장은 감사라는 도덕적 반응 대신 부채의 증거인 은인을 눈앞에서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자유를 얻으려는 비합리한 선택을 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적 본성은 종종 교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되기도 한다. 일부 목회자와 공동체는 십자가의 희생을 성도들의 양심을 압박하는 영적 부채로 둔갑시킨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겨우 이것밖에 못 하느냐"는 식의 가르침은 성

십자가 은혜, 부채감보다 사랑으로

도들에게 끊임없는 부채감을 주입하여 헌신을 강요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다. 은혜를 갚아야 할 빚으로 규정하는 순간 복음은 성도를 묶어매는 통제 수단이 되고 신앙은 기쁨 없는 부채 상환의 노동으로 전락한다. 공포와 죄책감으로 세워진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채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며 30년 상환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분명 갚아야 할 채무의 의무는 존재하지만 그 조건이 워낙 파격적이고 감당 가능하기에 삶의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대출 덕분에 내 집이라는 안식처를 얻고 내일을 꾸밀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이와 같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빚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얻고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가장 낮은 이율의 사랑이다. 의무는 사랑에 대한 자발적 반응으로 남되 그 무게가 인간을 짓누르지 않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부채감을 이용해 인간을 조종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빛과 독촉장을 내밀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무거운 고금리 빚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다. 주님은 우리를 빚진 종으로 부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거져 누리는 자녀로

세우셨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 부르짖느니라"(로마서 8:15)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통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완전한 자유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으시며 그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초대하실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을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호흡이다. 참된 헌신은 빛을 갚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라는 자각에서 흘러나오는 감사한 반응이어야 한다. 이번 사순절, 우리를 억눌러온 모든 영적 가스라이팅과 채무 증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한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 거주 권리를 보장하듯 주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에 영원하고도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십자가는 평생 갚아야 할 무거운 빚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사랑의 품이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 죄책감 없이 당당히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자녀의 권세다. 이번 사순절에는 "무엇을 더 해드려야 할까"라는 불안 대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평안에 잠겨보기를 권한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채무자가 아닌 사랑받는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기고



조옥현
전남도의회 의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기반 약화라는 삼중의 압박을 동시에 겪고 있다. 광역 단위의 경쟁력 확보 없이는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기된 해법이다. 그러나 위기의식이 클수록 더욱 냉정하고 냉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통합이 단순히 규모 확대만 머문다면 결국은 또 다른 불균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전남광주 통합은 결코 흡수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표성 설계 없는 광역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첫 시험대에 오른 전남과 광주의 통합 논의는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행정 체계 개편의 출발점이며 통합의 성공 여부는 행정 규모의 확대가 아닌 통합 이후에도 민주적 대표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통합시 광역의회 '도농 균형 혼합형'으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통합 논의는 속도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 '선 통합 후 보완'이라는 기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둔 혼란 우려를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은 바로 '광역의회 선거구' 문제다.

전남의 농산어촌과 광주 도시권은 인구 구조와 성격이 현격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인구비례 원칙만을 엄격히 적용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정치적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존 구조를 유지한다면 헌법상 '표의 등가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이 딜레마는 단순히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지방자치는 행정 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도시·산간·농어촌 지역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훨씬 넓고 생활 인프라와 복지, 교육, 교통, 농수산 정책 등 복합적 행정 수요를 안고 있다. 이런 지역의 대표성이 제도적으로 약화된다면 통합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도시 집중'으로 인식될 수 있다. 통합 이후 주민들이 "우리의 목소리가 줄어들었다"고 체감한다면 그 통합은 형식적으로는 완성될지 몰라도 구조적 갈등을 함시 내포하게 된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고민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병행하는 혼합형 제도를 통해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함께 추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역시 연동형 혼합제를 도입해 대표성 왜곡을

완화하고 있다. 물론 완벽한 해법은 없지만 두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분명히 시급히 필요한 과제다.

전남·광주 통합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인구비례 지역구를 기본으로 하되 권역별 정당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도시·산간 지역의 최소 대표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도농균형 혼합형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의 정당성과 농촌의 존재 가치를 함께 존중할 균형적 설계가 가능한 절충안이다.

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흡수여서는 더욱 안 된다. 서로 다른 생활 조건과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각각의 지역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적 균형이 설계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효율을 얻는 대신 신뢰를 잃게 된다. 지역간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고 체감하는 순간 통합은 제도적으로는 완성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행정적 집중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이다. 도시는 인구에 비례해 대표되고 농산어촌은 존재 가치에 비례해 존중받는 구조. 이것이 통합특별시가 국가적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통합은 숫자의 결합일 뿐 결론적으로 공동체의 통합은 아니다.

통합의 크기를 말하기 전에 대표성의 공정함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것이 통합을 '흡수'가 아닌 '상생'으로 만드는 핵심 열쇠이다.

社說

유족 합의로 무안공항 재개항 최대한 당겨야

12·29 제주항공 참사로 1년 넘게 문을 닫고 있는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을 열 것을 주문하면서 전남도가 7월 재개항을 목표로 후속 조치를 나서고 있다.

무안공항 재개항은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와 주변 상권을 살리는 것은 물론 인천공항이나 김해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광주관광공사 사장의 재개항 요청에 이 대통령 이 화답하면서 정부 차원의 관심사가 됐다.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유족들과의 협의를 전제로 올해 상반기에 개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상황에서도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닌 로컬라이저만 철거하고 정비하면 재개항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유족들의 동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어 쉽지 않다. 유족들은 대통령의 신속한 재개항 검토 지시에도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대책 마련이라는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명목적으로는 재개항의 키를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 재개항 허가를 해주면 되지만 초창기 제주항공 참사를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유족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 마침 사고 현장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까지 발견돼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재개항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유족들의 요구처럼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되 최대한 재개항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강기정 광주지사는 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7월 무안공항을 재개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항공 접근권 개선을 위해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인천공항 간 국내선 취항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무안공항 재개항이 불투명해지자 정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두 차례 요구한 적이 있다. 국토부는 함몰되고 했지만 무안공항 재개항을 원칙으로 하되 상반기 안에 유족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광주공항 임시 취항 카드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자체, 외국인 정착 가로막는 주거 분쟁 돕길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등으로 주거 갈등을 겪는 외국인 거주자가 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광주 고려인마을에선 외국인 거주자들이 임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수리비와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 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광주YMCA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부 집주인들이 외국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언어가 서툰다는 점을 악용해 꼼꼼하게 설명하지 않고 퇴거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공제하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들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광주YMCA는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어와 러시아어 주택임대차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외국인 밀집지역에 배포해 주거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주시 등 자치단체가 나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5만명에 가깝고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외국인 증가율 1위로 일손 부족도 이들 인력으로 메우고 있다. 주거는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일부 부도덕한 집주인들의 횡포도 보증금을 떼거나 길거리로 내몰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주거 갈등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無等鼓

'효자 종목'하면 우선 떠오르는 경기들이 있다. 하계 스포츠에서는 양궁, 동계 스포츠에서는 쇼트트랙이 있다. 백발백중 금메달을 명중시키고 찰나의 승부에서 승 마하는 질주를 펼치면서 말 그대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메달을 책임지는 든든한 종목들이다. 보는 이들에게는 믿고 보는 종목이지만 안에서 뛰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더 크다.

두 종목의 경우 올림픽으로 가는 길부터 쉽지 않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사실상 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종목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심석희가 밀고 최민정이 달리면서 한국은 극적인 예선 통과를 앞두고 있다. 워낙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 견제도 심하다. 한국 양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경기 룰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저력을 발휘해 왔다. 쇼트트랙에서도 교묘한 견제들이 있다. 직접 몸을 부딪지면서 싸우는 종목이다 보니 경기 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빙질 관리, 판정이라는 변수도 있다. 쇼트트랙은 사실 외부 견제보다는 내부의 견제가 더 큰 문제이기도 했다. 잊을만

하면 파벌 논란이 불거져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패럴림픽 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올림픽 무대를 떠나는 '지존' 최민정도 쇼트트랙의 또 다른 얼굴을 봤다. 2018 평창 올림픽에서 발생한 '고의 충돌' 논란으로 최민정은 빙판 위에서 동료에게 상처를 받았다.

최민정은 앞선 논란을 뒤로 하고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스포츠인의 품격을 보여줬다. 쇼트트랙팀 '주장'으로 심석희를 동료로 품은 그는 여자 3000m 계주

에서 '월님'으로 똘똘했다. 심석희가 밀고 최민정이 달리면서 한국은 극적인 예선 통과를 앞두고 있다. 워낙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다 보니 견제도 심하다. 한국 양궁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경기 룰이 여러 차례 달라졌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고 저력을 발휘해 왔다. 쇼트트랙에서도 교묘한 견제들이 있다. 직접 몸을 부딪지면서 싸우는 종목이다 보니 경기 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빙질 관리, 판정이라는 변수도 있다. 쇼트트랙은 사실 외부 견제보다는 내부의 견제가 더 큰 문제이기도 했다. 잊을만

을 목에 걸었다. 여자 대표팀의 질주도 상승세를 탄 한국은 김길리의 여자 1500m 금메달까지 더해 금 2, 은 3, 동 2개의 성적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오로지 실력과 노력으로만 세계의 견제를 뚫고 정상을 지키고 있는 양궁과 선수들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쇼트트랙. 이번 올림픽을 통해 쇼트트랙이 앞선 논란을 털고 박수 받는 '국민 종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 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사 진 부 220-0693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222-0195) | (FA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디 자 인 실 220-0536 | 제 2 사 회 부 220-0680 |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